

NEXT>경기



제 3차 경기학 포럼

경기도민 1,300만 시대의 과제와 대비

일 시 | 2016년 12월 9일(금) 14:00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주 최 | 경기학연구센터, 경기학회, 경기연구원

□ 일 정

구분	진행시간		소요 시간 (분)	주요내용
사회 : 김덕목(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				
개회	14:00	14:30	30	- 접수 및 개회
발표	14:30	15:00	30	- 제 1주제 : 경기도 인구구조 변동과 함의 발 표 자 : 이성용(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5:00	15:30	30	- 제 2주제 : 경기도 1인 가구 변화와 도시·주택정책방향 발 표 자 : 이외희(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15:30	16:00	30	- 제 3주제 :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과제와 전망 발 표 자 :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소장)
휴식	16:00	16:20	20	- 휴 식(장내정리)
종합 토론	16:20	17:30	70	○ 경기도 인구증가 구조변화에 따른 경기학의 역할 - 좌 장 : 양훈도(한빛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토 론 : 이진복(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이정환(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인수(경인일보 문화부장) 정 암(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폐회	17:30	17:45	15	- 폐 회

□ 목 차

<발표>	
제1주제 - 경기도 인구구조 변동과 그 함의.....	1
이성용(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제2주제 - 경기도 1인 가구 변화와 도시·주택정책 방향.....	15
이외희(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제3주제 -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과제와 전망.....	29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소장)	
<종합토론>	
좌장 - 양훈도(한빛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 이진복(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이정환(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인수(경인일보 문화부장), 정암(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발 표

1

경기도 인구구조 변동과 그 함의

이 성 용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경기도 인구구조 변동과 그 함의

이성용(강남대학교)

수도권의 인구집중, 1960-2015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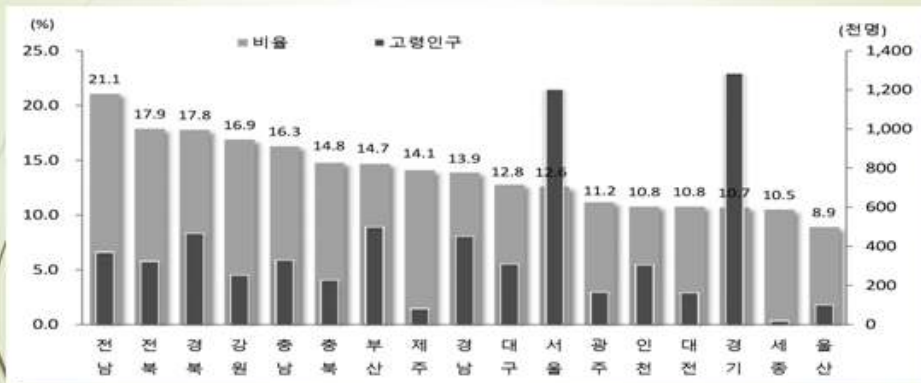
	1960	1975	1985	1995	2000	2005	2010	2015
서울	1,194	6,879	9,625	10,231	9,895	9,820	10,065	9,904
경기도(인천)	2,671	4,034	6,176	9,958	11,459	12,946	14,374	15,369
경기도		3,237	4,792	7,650	8,984	10,415	11,651	12,479
수도권	3,865	10,913	15,801	20,189	21,891	22,767	24,439	25,274
전국	24,982	34,678	40,419	44,609	46,136	47,279	49,711	51,069
서울/전국	4.7	19.8	23.1	22.9	21.4	20.8	20.2	19.4
경기&인천/전국	10.7	11.6	15.3	22.3	24.8	27.3	28.9	30.1
경기도/전국		9.3	11.8	17.1	19.5	22	23.4	24.4
수도권/전국	15.5	31.5	39.1	45.3	46.3	48.2	49.2	49.5

<표 2> 수도권 인구증가 규모와 비율, 196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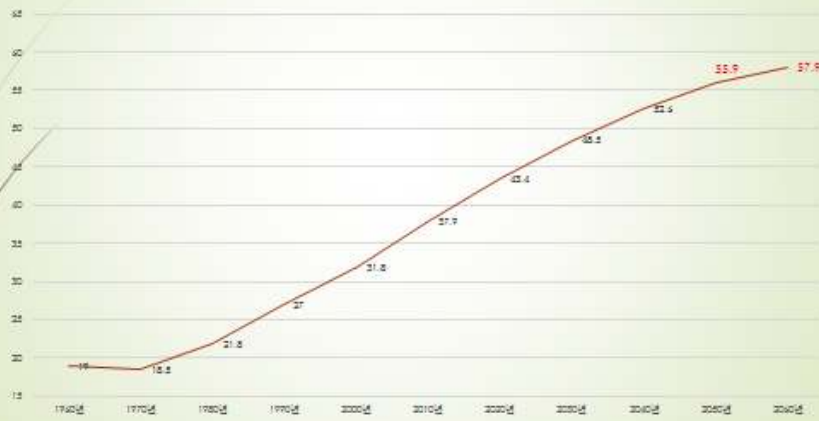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1960-75	1975-85	1985-95	1995-2005	2005-15
서울	5,685	2,746	606	-411	84
경기도(인천포함)	1,363	2,142	3,782	2,988	2,423
경기도		1,555	2,858	2,765	2,064
수도권	7,048	4,888	4,388	2,578	2,507
전국	9,696	5,741	4,190	2,670	3,790
서울	476	40	6	-4	1
경기도+인천	51	53	61	30	19
경기도		48	60	36	20
수도권	182	45	28	13	11
전국	39	17	10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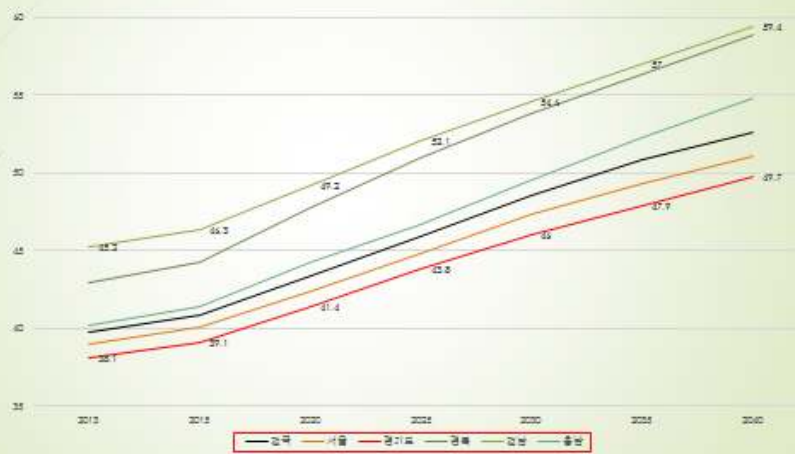
2015년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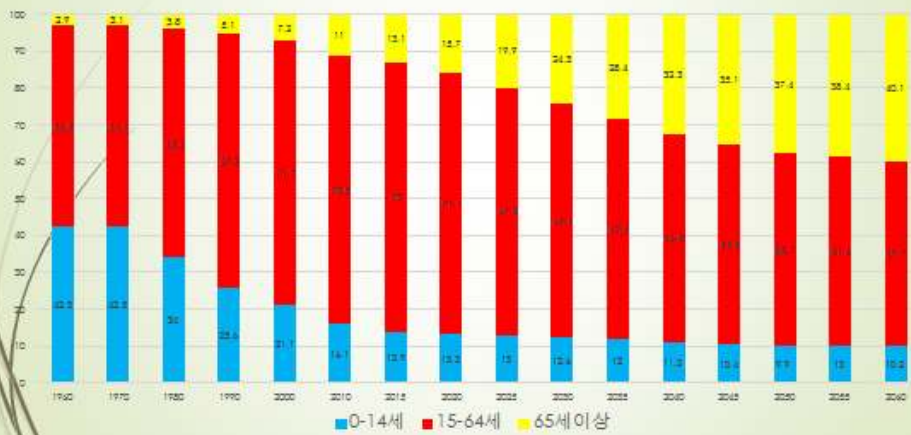
중위연령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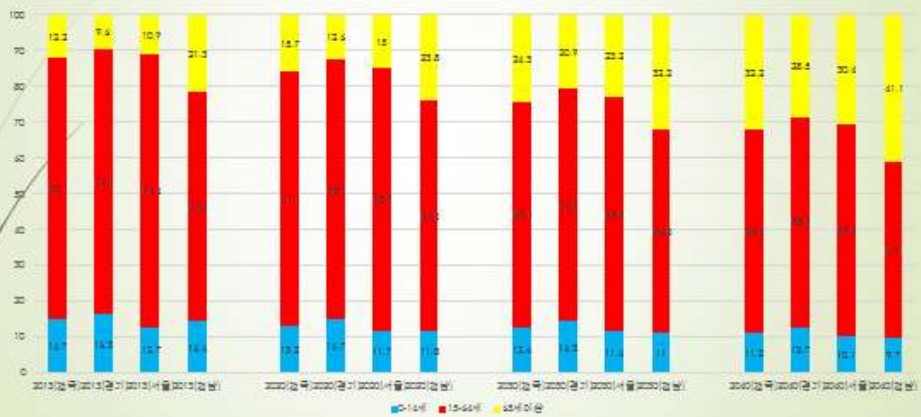
지역별 중위연령 변동: 2013-2040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동: 196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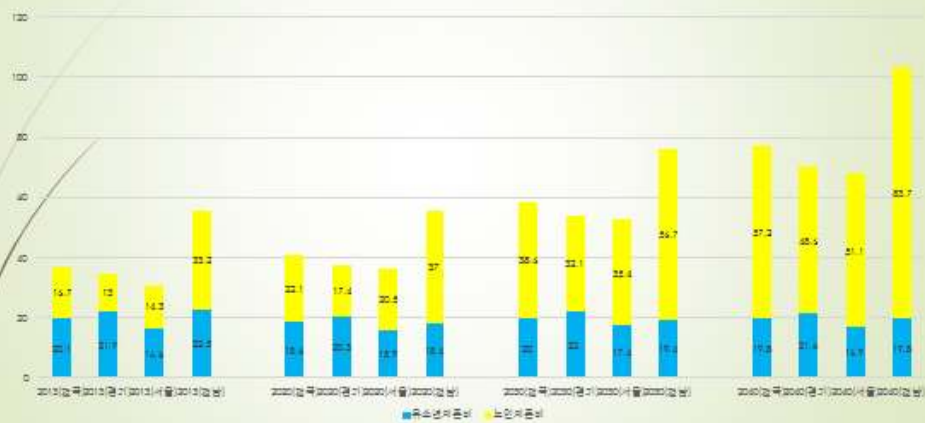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구성비 변동: 2013-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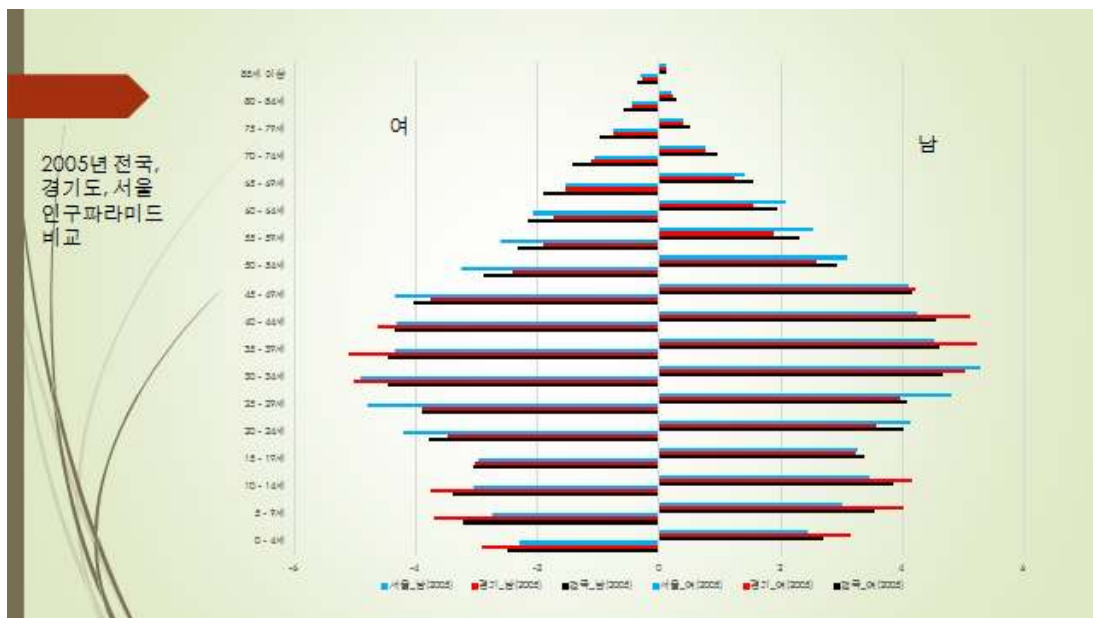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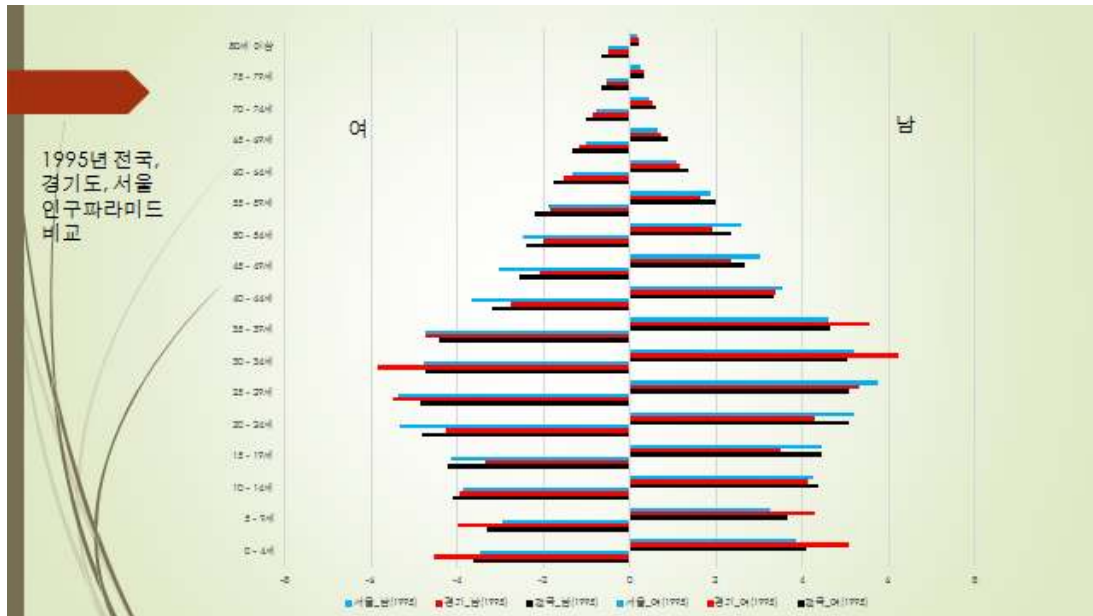


노인의존비 및 유소년의존비 변동: 196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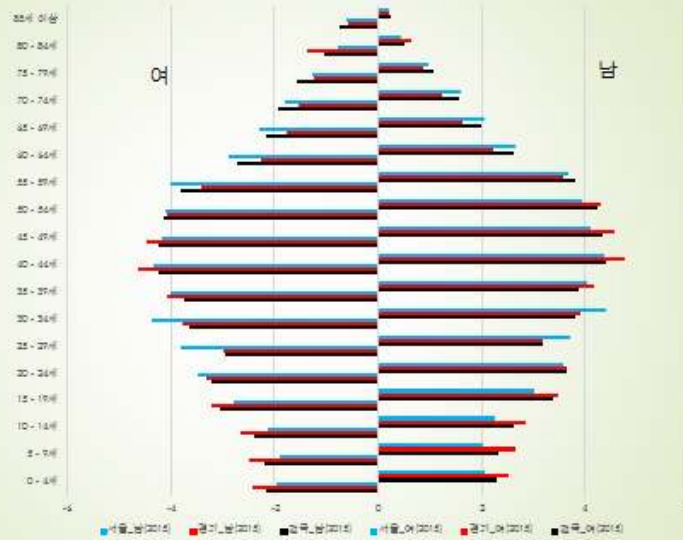


지역별 노인의존비와 유소년 의존비 변동: 2013-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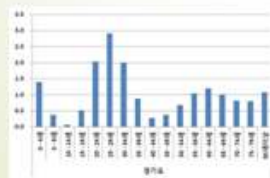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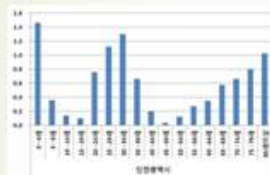




2015년 전국, 경기도, 서울 인구파라미드 비교



경기도 인천 인구 증가 패턴



모든 연령집단에서 인구가 유입하면서 전반적 인구의 증가

특히 젊은 청년인구의 유입이 중심으로 이뤄져 인구구조가 개선되고, 고령화를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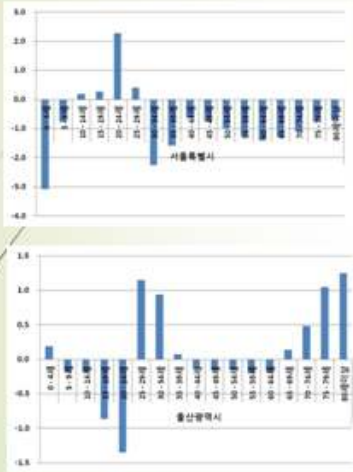
인천, 경기

인구의 증가로 교육, 주택, 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주로 서울로부터의 유입

고연령 노인의 순유입은 절대규모의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음

청년인구 증가형



-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20대 인구만이 유일되는 유형
- 전체적 인구구조는 개선되지만, 교육 주거 등의 사회기반 시설의 약화의 가능성
 - 지역 안정성의 문제
- 서울, 울산

경기도 시군별 인구크기 변동 (1)

	1985	1995년	2005년	2015년
경기도	4,794	7,563	10,580	12,337
수원시	430	754	1,039	1,171
성남시	447	869	980	963
부천시	456	779	855	844
광명시	219	350	330	344
평택시	180	312	377	449
동두천시	68	71	81	96
안산시		510	673	697
고양시	183	518	895	1,008
파천시		68	65	69
구리시		142	193	184
남양주시	234	229	434	640
오산시		70	125	206
시흥시	163	133	383	393

경기도 시군별 인구크기 변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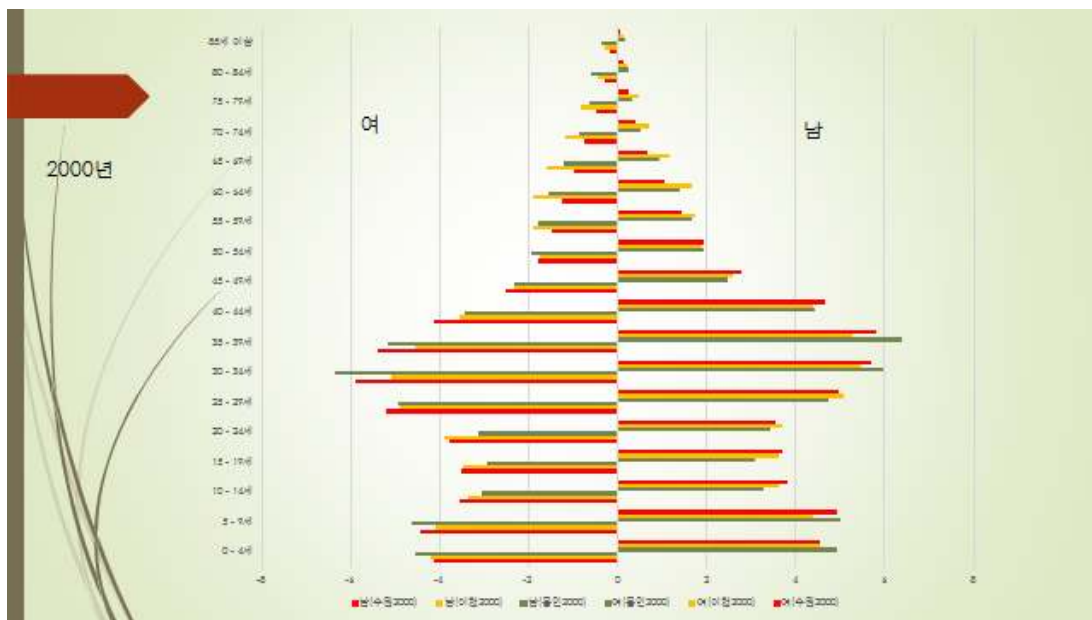
	1985	1995년	2005년	2015년
군포시		235	276	286
의왕시		108	146	157
하남시		115	131	156
용인시	154	242	667	964
파주시	164	163	254	414
이천시	125	155	191	203
안성시	121	120	155	179
김포시	110	107	207	343
화성시	226	158	284	566
광주시	151	86	210	303
양주시	74	94	156	202
포천시	108	118	152	153
연천군	64	52	48	45
가평군	57	49	55	61
양평군	85	70	85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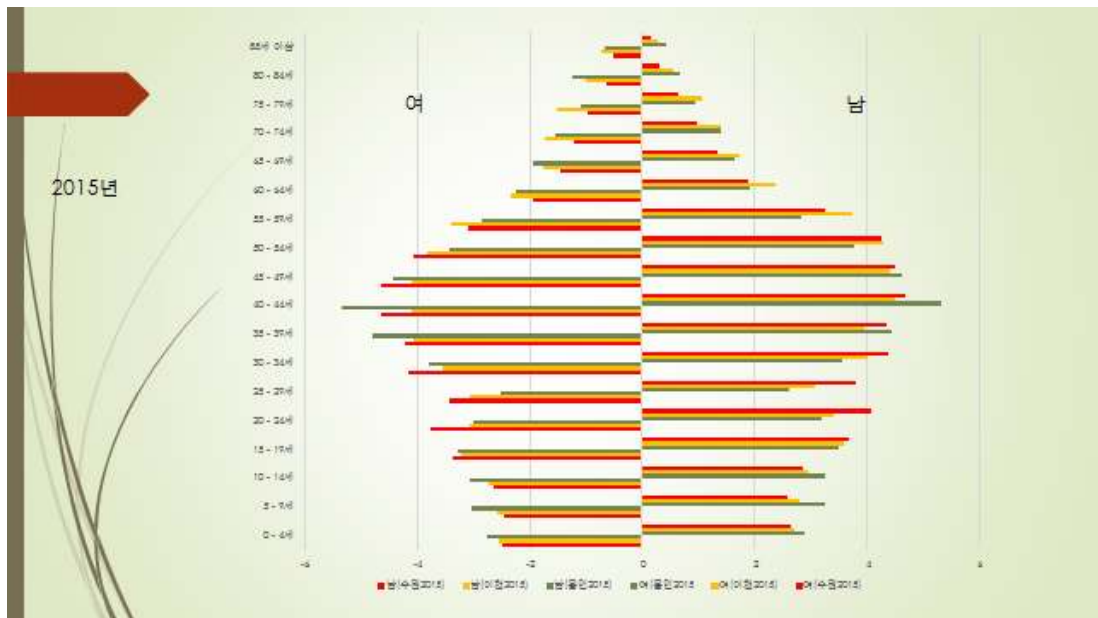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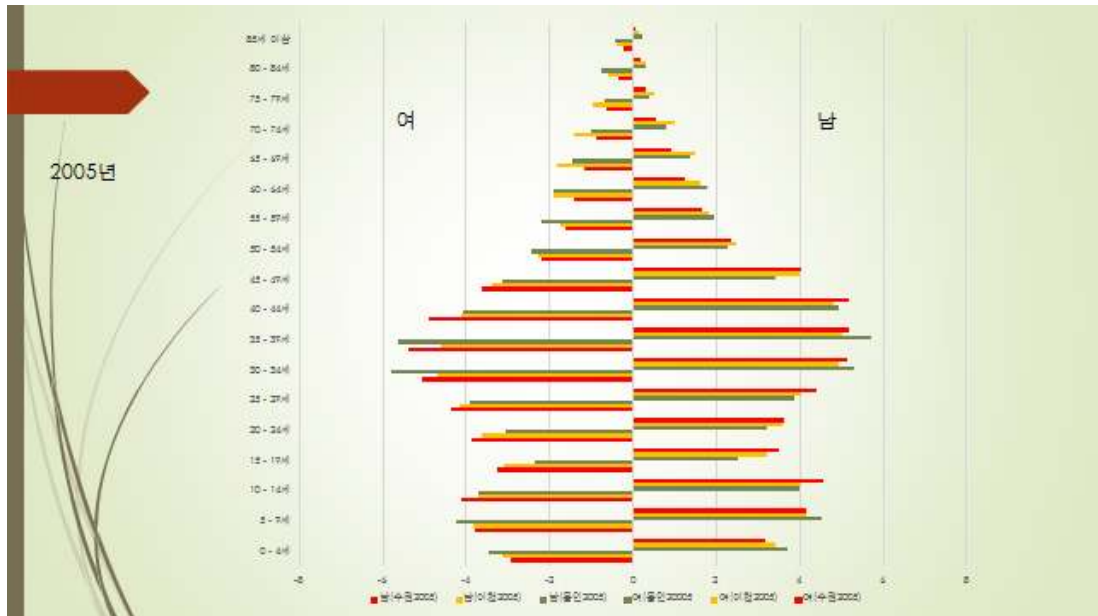
경기도 시군별 인구 증가분 [1]

	1985-95	1995-2005	2005-15
경기도	58	40	17
수원시	75	38	13
성남시	94	13	-2
부천시	70	10	-1
광명시	60	-6	4
평택시	73	21	19
동두천시	4	14	19
안산시		32	4
고양시	183	73	13
파천시		-4	6
구리시		36	-5
남양주시	-2	90	47
오산시		79	65
시흥시	-18	188	3

경기도 시군별 인구 증가분 [2]

	1985-95	1995-2005	2005-15
군포시		17	4
의왕시		35	8
하남시		14	19
용인시	57	176	45
파주시	-1	56	63
이천시	24	23	6
안성시	-1	29	15
김포시	-2	93	66
화성시	-30	80	99
광주시	-43	144	44
양주시	27	66	29
포천시	9	29	1
연천군	-19	-8	-6
가평군	-14	12	11
양평군	-18	21	24







함의

- 1990년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
 - 서울인구 정체, 경기도 인구는 계속 증가
 - 인구가주 수도권 인구변동에 막대한 영향
 - 인구가주는 경기도 전체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인구구조에도 영향
- 지역인구학(local demography)의 활성화.
 - 비즈니스: 예, 자영업, 노인병원,
 - 행정: 청소년 교육.
-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
 - 연금 및 사회보장
 - 노인복지시설 및 일상생활의 변동

발 표

2

경기도 1인 가구 변화와 도시·주택정책 방향

이 외 희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경기도 1인 가구 변화와 도시·주택정책 방향

이외희*

■ 목차

- I. 경기도 1인가구 현황 및 전망
- II. 경기도 1인 가구의 주요 특성
- III. 1인 가구를 위한 경기도 도시·주택정책 방향

I. 경기도 1인가구 현황 및 전망

1. 경기도 가구 현황

- 1990-2015년 사이 전국 가구는 72.2%, 수도권은 93.3%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185.4%가 증가하여 훨씬 높은 증가폭을 보임.
-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전국 대비 수도권 가구의 비중이 43.3%에서 48.7%로 증가하였고, 경기도 역시 14.0%에서 23.2%로 높아짐.
- 특히 전체 가구 유형 중 1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2세대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 1990년 전국 1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의 비중은 각각 10.7%, 9.0%에서 2015년 17.4%, 27.2%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2세대 가구의 비중 감소에도 편부모+자녀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7.8%에서 10.8%로 증가함.

*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표 1 가구수 현황과 변화

구분		1990	2000	2010	2015
가구수 (천가구)	전국	11,361	14,391	17,574	19,561
	수도권	4,923	6,552	8,415	9,519
	경기도	1,590	2,692	3,908	4,538
구성비(%)	전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3.3	45.5	47.9	48.7
	경기도	14.0	18.7	22.2	23.2
연평균 증가율(%)	전국	-	2.09	1.91	2.16
	수도권	-	2.46	2.24	2.50
	경기도	-	4.38	3.06	3.03

주 : 총가구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직전 5년 대비 산정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재구성

표 2 세대 구성비 변화 및 증가율

구분(%)		총계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 구	단독가구	비혈연 가구	
				소계	편부모+자 녀					
구성비	전국	1990년	100	10.7	66.3	7.8	12.2	0.3	9.0	1.5
		2015년	100	17.4	48.8	10.8	5.4	0.1	27.2	1.1
	경기도	1990년	100	10.7	67.1	6.9	12.1	0.4	8.1	1.5
		2015년	100	15.9	53.7	10.8	5.8	0.1	23.4	1.1
증가율	전국	'90-'15	68.3	172.6	23.9	131.8	-25.6	-68.1	409.4	29.0
	경기도	'90-'15	170.8	301.2	116.8	327.3	30.2	-56.3	679.4	91.4

2. 1인 가구 현황과 전망

- 전국 1인 가구는 2010년 현재 23.9%에서 2020년 29.6%, 2030년 32.7%로 늘어날 전망이며 2인 가구 역시 2020년 29.0%, 2030년 33.0%로 늘어나 2030년에 1·2인 가구 구성비가 6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 경기도 1인 가구 역시 2010년 현재 20.4%에서 2020년 25.5%, 2030년 28.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인 가구는 2020년 26.7%, 2030년 31.2%를 차지할 전망이다.

표 3 장래가구 추계

구분(%)	전국				경기도			
	구성비			2010 -2030 증가율	구성비			2010 -2030 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전체 (천가구, 100%)	17,359	19,878	21,717	25.1	3,839	4,686	5,312	38.4
1인	23.9	29.6	32.7	70.7	20.4	25.5	28.7	95.0
2인	24.2	29.0	33.0	70.3	21.6	26.7	31.2	99.6
3인	21.3	21.1	20.2	18.3	22.6	23.2	22.7	38.5
4인	22.5	15.7	11.3	-37.3	26.3	19.0	13.9	-26.7
5인	6.2	3.6	2.3	-53.9	7.0	4.3	2.8	-45.7
6인 이상	1.8	1.0	0.7	-55.4	2.1	1.2	0.8	-48.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장래가구추계

- 1인 가구의 증가는 만혼, 이혼을 비롯한 핵가족화로 1세대 가구 비중이 늘고, 2·3세대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 1인 가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OECD 국가 평균 1인 가구 비율(2010년) 역시 27.7%로 선진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표 4 인구동태 변화

구분	초혼연령		조이혼율	조사망률	기대수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0년	27.79세	24.78세	1.1	5.6	67.29세	75.51세
2015년	32.57세	29.96세	2.1	5.4	78.99세*	85.48세*

주 : *는 2014년 기준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

II. 경기도 1인 가구의 주요 특성

1. 분석개요

- 다음의 분석은 「경기도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과제」(2012, 이외희 외)의

연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동 연구는 1·2인 가구의 급증, 고령가구의 증가,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경기도 가구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와 주택정책의 변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분석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와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자료(2010)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원수별, 성별, 연령대별, 시/도농복합시/군, 신도시/구도시로 구분하여 학력, 연령, 소득, 주택사용면적, 점유형태, 주택유형 등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음.

표 5 특성별 가구원수별 가구주 구성비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일반가구		100.0	20.3	21.6	22.7	26.3	9.1
성별	남성	100.0	13.7	20.3	23.7	31.5	10.8
	여성	100.0	42.5	26.0	19.0	8.8	3.6
연령별	60대	100.0	19.9	37.4	23.7	11.6	7.4
	70대	100.0	30.1	43.2	14.1	5.7	6.9
	80대 이상	100.0	42.4	38.2	9.9	4.4	5.1
지역 유형별	시	100.0	21.4	20.7	22.8	26.5	8.6
	도농	100.0	17.8	22.7	22.8	26.5	10.2
	군	100.0	23.9	32.1	18.4	16.5	9.2
신구 도시별	신도시	100.0	19.7	19.4	23.3	28.9	8.7
	구도시	100.0	23.0	21.6	22.5	24.6	8.4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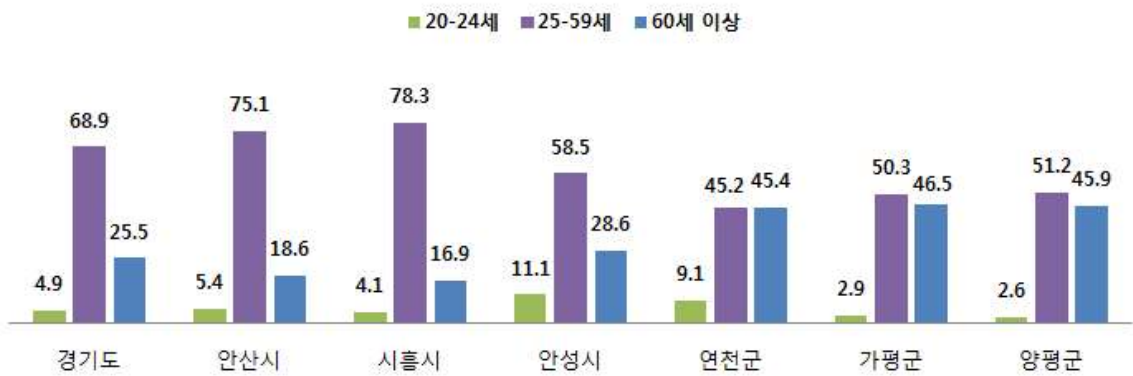
2. 1인 가구의 지역적 분포 특성

- 경기도 1인 가구수는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농촌 등 외곽지역에 더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수는 대도시 지역인 수원, 성남이 9만 이상, 부천, 안산, 고양, 용인이 6만 이상인 반면, 1인 가구 구성비는 연천, 가평, 안성, 안산이 2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 등 세부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1인 가구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인 안산, 시흥 등에서는 근로자, 대학도시인 안성 등은 대학생, 연천, 가평, 양평 등 농촌지역은 고령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인 안산의 경우 25-29세 비중이 75.1%, 시흥은

78.3%로 경기도의 68.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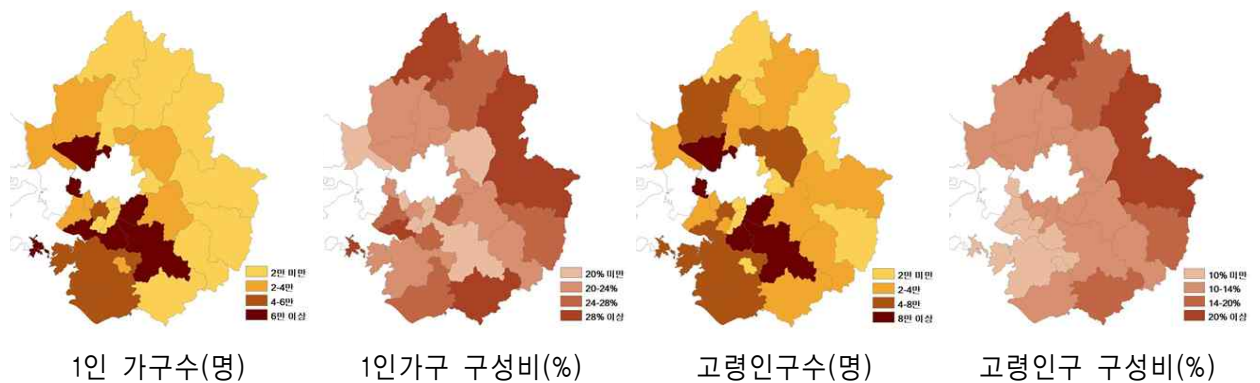
- 대학도시인 안성의 경우는 20-24세 비중이 11.1%로 경기도의 4.9%보다 높음.
 -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연천, 가평, 양평은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1인 가구 중 각각 45.4%, 46.5%,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고령 1인 가구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나는데, 2015년 현재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그 외에 여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안성시 등도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해당하고 있음.

그림 1 주요 특성지역의 1인 가구 연령별 현황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현황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3.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학력, 소득, 주거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함.
 - 1인 가구의 71.7%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초등학교 이하 비율이 18.0%, 월세 비율은 43.2%로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36.9%, 20-40㎡ 규모 주택 거주비율은 41.7%로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일반가구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음.
- 또한 전체 1인 가구의 24.3%, 2인 가구 35.4%가 60세 이상인 가구이며, 여성 1인 가구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37.0%로 더 높게 나타남.

표 6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전체 가구
소득	저소득층	71.7	45.5	28.9
학력	초등학교 이하	18.0	15.5	10.6
점유형태	월세(보증금유)	37.6	19.2	18.7
	월세/사글세	5.6	1.7	2.0
주택유형	다가구단독	36.9	18.9	17.9
주택사용면적	20 - 40㎡	41.7	18.3	13.9
연령	60세 이상	24.3	35.4	19.4
성별(60세 이상)	남성	12.6	39.8	17.3
	여성	37.0	24.0	26.7

4. 여성 1인 가구와 고령 1인 가구 특성

-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는 남성 가구에 비해 소득, 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가구의 초등학교 이하 비율은 22.0%, 60세 이상 비율은 26.7%이며, 저소득층은 62.8%, 월세 비율은 30.8%이고, 다가구 단독주택 24.6%로 남성 가구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데,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비율이 29.1%, 60세 이상 37.0%, 저소득층 82.1%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 1인 가구 역시 학력, 소득, 주거환경에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저학력,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의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1인 가구는 초등학교 이하 비율이 60대 45.6%, 70대 68.5%, 80대, 79.7%, 저소득층 비율은 60대 93.4%, 70대 96.6%, 80대 이상 96.5%로 나타나는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과 주거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택에 있어서는 고령 1인 가구가 10-20대보다 평균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열악한 가구와 양호한 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자가 비율이 높고, 40㎡ 이하 규모 주택 거주 비율은 더 낮으며, 일반단독 거주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여성 1인 가구 특성

구분(%)		여성 1인	남성 1인
학력	초등학교 이하	29.1	7.7
	대학 이상	10.3	8.3
연령	60세 이상	37.0	12.6
소득	저소득층	82.1	59.8
	고소득층	0.6	2.7
점유형태	자가	30.3	17.4
	월세(보증금유)	33.2	41.7
	월세/사글세	4.0	7.1
주택유형	다가구단독	31.4	42.0
주택사용면적	20㎡ 이하	9.9	19.0

표 8 고령 1인 가구 특성

구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1인		1인		1인	
학력	초등 이하	28.9	45.6	49.7	68.5	66.6	79.7	10.6
	대학 이상	20.2	11.7	16.3	7.1	11.3	5.0	43.5
소득	저소득층	46.7	93.4	76.2	96.6	86.7	96.5	29.0
주택사용면적	20㎡ 이하	4.9	18.6	5.5	11.6	2.4	6.3	3.1
	20 - 40㎡	10.4	28.2	11.3	27.2	17.3	20.3	13.9
점유형태	자가	68.7	45.5	67.2	50.0	58.7	44.8	49.1
	전세	16.8	24.5	18.2	26.0	21.3	27.5	28.0
	월세(보증금 유)	11.3	22.1	10.5	16.6	13.6	18.1	18.7
주택유형	단독	36.0	46.3	42.5	48.4	46.1	52.7	29.5
	다가구 단독	16.4	26.6	16.9	23.9	25.4	14.3	17.9

5. 지역유형별 1인 가구 특성

- 시 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시, 군 지역의 1인 가구가 학력, 소득, 주거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 지역의 경우 1인 가구의 49.7%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 지역과 도농복합시보다 고령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
 - 다만, 주택사용면적, 점유형태의 경우는 시지역이 도농복합시, 군지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의 경우 군지역에서, 다가구 단독 거주 비율은 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1인 가구의 학력, 소득, 주거환경이 시군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임.

표 9 지역유형별 가구 특성

구분(%)		시		도농복합시		군		전체
			1인		1인		1인	
학력	초등 이하	9.4	15.6	11.9	21.3	26.5	41.0	10.6
	대학 이상	44.7	41.2	42.6	36.7	25.0	23.4	43.5
연령	60세 이상	17.7	21.5	21.4	28.7	37.8	49.7	19.4
소득	저소득층	28.1	70.4	28.4	72.9	56.4	86.2	29.0
주택사용 면적	20㎡ 이하	3.9	17.1	0.6	3.7	2.9	7.8	3.1
	20 - 40㎡	15.9	45.5	8.0	31.8	10.3	22.4	13.9
점유 형태	자가	46.4	26.8	53.4	31.2	66.3	54.3	49.1
	전세	29.8	27.1	25.4	25.8	14.7	14.6	28.0
	월세(보증금 유)	20.1	40.5	16.4	32.7	10.1	16.4	18.7
주택유형	단독	29.8	52.7	26.2	47.6	63.5	69.0	29.5
	다가구 단독	22.5	42.5	9.2	25.6	7.7	13.1	17.9

- 신·구도시별 특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구도시가 신도시에 비해 낮은 학력, 높은 고령인구 비중, 낮은 자가 비율을 보임.
 - 또한 신도시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비율을 나타내나, 구도시 1인 가구는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가 51.3%로 높은 것이 특징임.
- 재정비사업 대상인 기존 시가지를 예로 살펴보아도, 1인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재정비 대상지역의 자가 비율은 20-30%, 세입자 비율은 75% 내외이며, 평균 주거면적은 50㎡ 이하로 열악한데, 전체 가구 중 약 40%가 1인 가구에

해당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사업취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시가지 정비에 난항을 겪고 있어, 1인 가구가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큼.

표 10 신구도시별 가구 특성

구분(%)		신도시		구도시		전체
			1인		1인	
학력	초등 이하	6.0	11.1	11.6	18.0	10.6
	대학 이상	60.5	56.0	38.4	37.6	43.5
연령	60세 이상	16.2	19.3	19.7	22.8	19.4
점유 형태	자가	49.8	21.4	43.6	17.5	49.1
	전세	30.3	33.2	31.3	33.9	28.0
	월세(보증금 유)	17.3	38.5	20.9	40.2	18.7
주택유형	단독	18.7	35.7	39.0	62.2	29.5
	다가구 단독	13.7	28.7	30.5	51.3	17.9
	아파트	64.9	33.9	39.3	15.9	54.5
	오피스텔	7.3	21.0	1.4	4.4	2.0

표 11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지구의 인구 및 가구특성 사례

구분	인구수(인)	세대수(호)	자가 비율 (%)	세입 비율 (%)	1인 가구비 (%)	평균주거면적
고양원당 촉진구역	31,510	13,529	26.4	73.6	39.6	42㎡
남양주덕소 촉진구역	11,508	4,653	27	73	57.2	66㎡미만 48%
군포역세권 촉진지구	35,543	14,443	24.1	75.9		47.2㎡

자료 : 경기도(2012). 내부자료

Ⅲ. 1인 가구를 위한 경기도 도시·주택정책 방향

1. 도시 및 주택정책 방향

- 1인 가구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주택의 양적 측면의 공급 못지않게 주거 복지 차원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1인 가구, 고령가구 등의 증가로 주거복지, 농촌지역 정비, 지역 공동체 활

성화 등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제도의 개선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시대와 기존 시가지 재생이 연계된 개발 및 정비 전략 역시 필요한 시점임.


2.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 1인 가구, 고령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함.
 -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공급 기준 개정 등을 통한 입주기회 확대, 적절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함.
 -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하여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주택 개조비용의 지원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개조 지원, 배리어프리 주택공급의 확대,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며, 아울러 노인공동주택의 공급 확대,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함.

3.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과 정비

- 지역 특성에 따라 1인 가구의 분포 및 거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맞춤형 주택공급 및 정비가 필요함.
 - 공장밀집지역 및 대학도시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구시가지의 경우 기존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 경제 공동체 활동, 교육 및 문화 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지역의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하여 복합화·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을 높일 방안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교류의 약화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 연결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임.

- 물리적으로 코하우징과 같은 공동 거주 공간 마련, 지역사회활동 참여 강화, 상호교류가 가능한 가족 간 네트워크 거주 또는 인·근거 거주 시스템 등을 적용한 주택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발 표
3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과제와 전망

오 경 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소장)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과제와 전망

오경석*

■ 목차

- I. 21세기 핵심 행위자(key player)로서의 이주민
- II. 지역사회와 새로운 시민권으로서 ‘주민권’
- III. 경기도 이주민 현황
- IV.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현황
- V. 다문화 수용성, 반다문화주의, 인종차별
- VI. 과제와 전망

I. 21세기 핵심 행위자(key player)로서의 이주민

유동성과 이동성이 보편화된 지구화와 다문화 시대, 불확실성과 불안전, 불안이라는 ‘세속의 삼위일체’가 편만한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 사회에서, 낯선 공간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주민은 ‘핵심 행위자(key player)’자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

거의 모든 선진 산업 국가들이 인구 및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주민 인구는 선진 산업 국가들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이주민의 유입으로 전체 인구가 1% 늘어날 때 국내 총생산이 1.25%에서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농축산어업, 소중제조업, 건설 및 단순서비스업 분야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면 존재 기반 자체가 와해될 정도이다. 경기도는 한국에 체류하는 전체 농업 이주노동자의 41%이상이 체류하는 곳이다.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류 사회의 규범과 문화, 관행을 ‘객관화’시키고, 다양성을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도 이주민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주민은 당연시 여겨져 왔던 주류적인 정체성, 표준화된 욕망, 금기와 장려의 기준 자체를 상대화시켜, 억압되었던 사회적 다원성과 잠재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양성과 개방성은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근대 민족(국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성 가능성(the need of democracy beyond the level of the nation-state)을 타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주민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문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는 평등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모든 구성원의 범주를 “단 하나의 민족 국가에 소속”되는 사람들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보편화된 이주는 근대 민주주의의 그와 같은 핵심적인 전제 자체를 재고하게 만든다. 국경을 넘는 이주의 보편화로 인해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공통된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칭했던 생각의 근거가 사라지는” 현상이 불가피해지는 탓이다(Castles · Davidson 2000).

국민국가 내부에서 생활하는 비국민 체류자로서의 이주민 혹은 “근대 국가 체제 내부에 거주하는 외부인들”로서의 이주민들이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없이 평등하게 공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대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민주주의의 탐색이 필수적이다. 근대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민주주의의 탐색이라는 과제는 결국 이주민에게 어떤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II. 지역사회와 새로운 시민권으로서 ‘주민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의사결정의 주체인가의 여부는 사회 통합 혹은 사회적 결속의 정도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법적,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상호작용이자 사회적 과정”으로서 사회적 결속은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서로를 지탱하고 강화하는 가치이자 과정”이다(김영정 2012).

사회 통합은 권리와 제도 차원은 물론이요, 생활 세계에서의 사회 관계, 참여,

소속감, 사회 자본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통합은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며,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등 배경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받고, 기회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사회관계 속에 포용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로 규정될 수 있다(김준현·문병기 2014).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으로 사회 통합은 정태적인 개념이지만, 그러한 통합이 외국인 주민 혹은 이주민으로 호명되는 사회적 소수자가 주류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진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사회 통합은 매우 동태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의 과정은 주류 사회와 소수자 집단 혹은 선주민과 이주민 관계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재조정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상호적인 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주민 사회 통합의 핵심 공간은 지역이다. 지역은 이주민의 유입 및 정착과 가장 친화적인 공간이자 이주민 사회 통합의 주도적 공간으로서 평가된다(최병두 2012). 지역은 일상 생활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시공간이다.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탈인격화되고 분절화된 정책의 범주라기 보다는 생활 세계의 전인격적인 주체로 존재한다.

지역 사회의 노동자요, 소비자요, 납세자요, 학부모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은 다를 바가 없다. 지역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기계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도이기 때문이다(Takeyuki Tsuda 2006).

선발 이주 국가들 대부분이 이주민 정책의 주도권을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Garbaye 2005). 이주민 정책은 국가 간 비교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동일 국가 안에서도 지역 별 편차가 매우 크다(박세훈 외 2010).

이주민 인권의 주체(agent) 역시 최근 들어 국가와 국제 사회에 지역 사회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삼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중심의 이주민 시민권 논의의 키워드는 ‘주민권(denzenship)’이다(Benton 2010). 지역사회 시민권(subnational forms of citizenship)으로서 협의의 주민권은 거주 여부에 근거해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가 이주민들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정치적 권리들과 서비스 목록으로 구성된다(Takeyuki Tsuda 2006). 광의의 주민권은 권리와 더불어 “지위, 정체성, 덕성”에 대한 규정과 보장을 포함한다(이용승 2016). 곧 지역

사회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요, 지위와 정체성, 자질(덕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주민권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이주민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주민 정책의 주류화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은 중앙 정부의 ‘대행자’ 정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의 주도권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화적인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정책들은 “전국단위의 공동사업”이 주류를 이룬다(고현웅 2016).

Ⅲ. 경기도 이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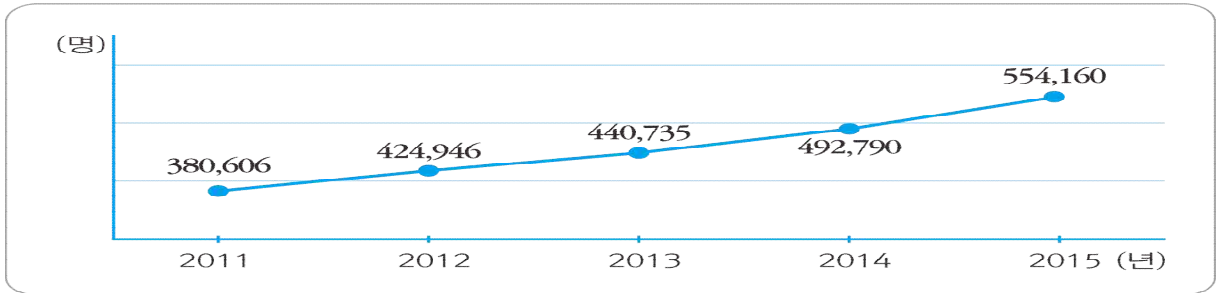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총 규모는 1,741,919명으로 이는 충청북도 전체 인구(158만명)보다 많은 규모로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그림1> 국내 체류 외국인주민 인구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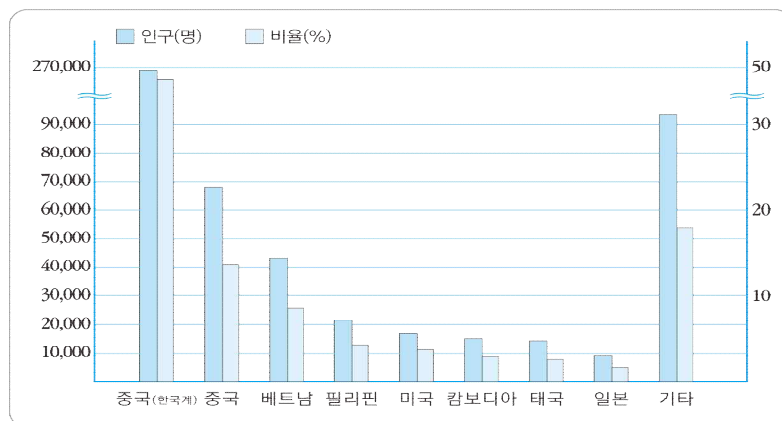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인구는 전국 최대 규모로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55만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 인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4년(492,790명)에 비해 12.4%가 증가한 규모이다.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그림2)

<그림2> 경기도 외국인주민 인구 증가 추이



체류 유형별로 인구 규모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다수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41.3%에 달하며, 외국 국적 동포 18.1%, 외국인 주민 자녀 9.5%, 결혼이민자 7.3%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 외국인 주민의 거의 50%에 달하는 규모로 압도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태국 등의 순이다.(그림3)

<그림3> 경기도 외국인주민 국적별 현황



외국인 주민의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외국인 집주 지역의 증가이다. 2015년 1월 현재 전국에 외국인 주민이 1

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외국인 집중지역)는 54개 곳인데, 그 가운데 경기도의 20개 시군이 포함된다. 경기도의 외국인집주지역은 2014년에 비해 3개 시가 늘어난 상황이다.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5%이상인 지자체는 안산시(11.8%), 시흥시(11.5%), 포천시(9.9%), 화성시(7.6%), 안성시(7%), 김포시(6.2%), 양주시(5.2%) 등의 7곳이다.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도 안산시 원곡본동을 비롯하여 10개 시군 21개 읍면동에 달한다.

IV.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현황

가족 동반이나 장기 체류를 불허하는 한국의 법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가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보고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자신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현숙·이진석 2011).

대부분이 미등록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 가족 조차도 조사 대상의 50%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사회 소속감을 표출한 바 있다(오경석 외 2013).

2015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수행한 “경기도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실태 조사” 결과도 기존 연구가 밝혀낸 사실들을 지지한다. 동료들과 나는 경기도내 7곳의 외국인밀집 시군을 포함한 총 14개 시군, 17개국 출신의 외국인 주민 560명 대상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오경석 외 2015).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젊고, 4년 이하의 단기, 남성, 등록 이주민들이 주류였다. 그들의 월수입은 대체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였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식료품 및 주거비에 지출되었고, 주거는 매우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회 통합의 네 가지 차원 곧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의 영역에서 응답자들의 선택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외국인을 사회 통합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나 우리 사회의 통념 혹은 기존의 연구 가설들과 달리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사회 통합이 실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표1)

<표1> 경기도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 조사 결과

범주	문항	결과
참여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	약간 혹은 매우 관심이 있다 72.2%, 그렇지 않다 26.9%
	현재 참여하는 모임의 유형	모국 모임 73.4%, 직장동료 모임 64.1%, 가족이나 친척 모임 45.5%, 거주지 주민 모임 34.5%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모임	지역자원봉사단67.0%, 지역스포츠클럽61.1%, 방범기동순찰대47.8%, 통반장활동43.4%
	한국 희망 체류 기간	영주거주 29.3%, 4년에서 6년 25.7%, 10년이상 15.7%, 1년에서 3년 15.2%, 7년에서 9년 10.9%
관계	긴급상황시 도움요청대상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55.4%, 한국 내 가족 또는 친지 15.4%, 직장동료8.6%, 한국 내 친구 또는 이웃 7.1%
	신뢰하는 타인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92.0%, 공무원79.7%, 직장동료75.2%, 한국인친구65.3%, 고용주62.8%
	사용하는 매체 유형	트위터나 페이스북 78.4%, TV 60.4%, 인터넷 카페 42.9%,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 37.1%, 신문이나 잡지 36.4%
	이사횟수	1회 미만 35.4%, 2회 20.2%, 3회 14.3%, 4회 4.8%
역능	사는 동네 소속감	매우 있다 23.6%, 약간 있다 46.3%, 별로 없다 15.5%, 전혀 없다 13.2%
	삶의 만족도	약간 만족 56.8%, 매우 만족 27.5%,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12.0%,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3.0%
	공공 및 상업 시설 단독탐방 능력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78.4%, 주민센터, 파출소,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70.9%,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 90.7%, 대형마트, 백화점, 시장 등 상업시설 91.8%
	한국어 향의 능력	조금 그렇다 51.3%, 별로 그렇지 않다 25.3%, 전혀 그렇지 않다 2.5%, 매우 그렇다 12.3%
포용	한국사회에서 존중받는 정도	조금 그렇다 51.4%, 별로 그렇지 않다 21.3%, 매우 그렇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6.4%
	차별 공간	거리나 동네26.4%, 상점, 음식점, 은행 등 18.0%,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 18.8%, 직장/일터 43.7%, 외국인 지원단체 15.0%

거주지역 평가(긍정의 정도)	일자리 70.4%, 출신국 사람 70.2%, 생활환경 75.5%, 주거비용 54.0%, 외국인 지원단체 66.2%, 외국인 행정 서비스 73.2%, 모국어 사용 63.2%
모국 문화 향유(긍정의 정도)	모국 음악/영화 77.2%, 모국의상 58.9%, 공공장소에서 모국어 대화 67.5%, 모국 음식 74.8%, 모국 종교 72.9%, 모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61.6%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젊은 단기체류 남성 이주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14.5%만이 '혼자 산다'고 답해 주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답한 76%의 응답자들 가운데 동거인이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다. 동거하는 가족의 유형으로는 배우자가 36.2%, 자녀가 8.0%였다. 가족 동거율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희망체류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영주거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29.3%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의 72.2%는 관심이 있다고 답해 주었다. 응답자들의 73.4%는 모국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 주민 모임 참여율도 34.5%에 이르렀다. 지역의 공적 모임 참여의사의 경우 67.0%는 지역자원봉사단 참여 의사가 있었고, 응답자들의 43.4%는 통반장 활동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대상 집단의 경우 요인 분석 결과 '이웃과 한국인 친구' 요인의 설명 변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한국인 근린들과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2)

<표2> 신뢰 대상에 대한 요인 분석

설명 \ 요인	이웃, 한국인 친구	외국인지원단체 관계자	직장 동료
설명변량	29.1%	16.3%	14.5%

p=0.17

응답자들은 매우 활동적인 소셜 미디어 유저들이기도 하여서 78.4%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한다고 답해 주었다. 응답자의 69.9%는 동네소속감이 있다고 답해 주었고, 84.4%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71.2%는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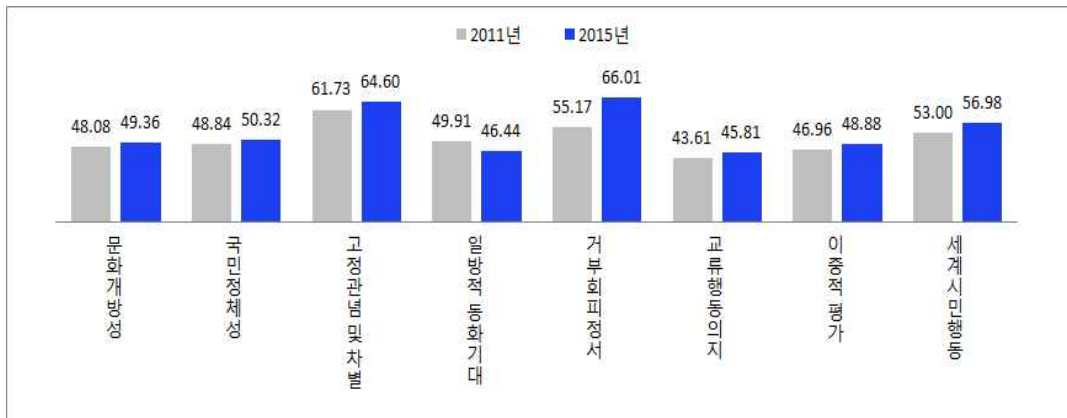
있다고 답해주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항의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3.6%였으며, 공공 및 편의 시설 단독 탐방 능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비율은 모두 90%를 상회했고, 의료기관의 경우 78.4%, 주민센터 등 공공 기관의 경우 70.9%에 달했다.

V. 다문화 수용성, 반다문화주의, 인종차별

21세기의 핵심행위자로 평가받는 이주민, 한국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이자 근린이요, 중요한 기여자로 자리잡고 있는 그들, 그러나 아직 그들을 “평등한 의사결정(곧 민주주의)의 주체”로 받아들일 만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시기상조인 듯 하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15년 조사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아졌으나 ‘일방적 동화기대’ 요소가 8개 구성요소들 가운데 유일하게 2011년보다 낮아졌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안상수의 2016).(그림4)

<그림4> 2011-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의 구성요소별 비교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의 40.7%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38.3%에 달했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

어질수록 차별 경험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의 이주민이 편견차별에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6.6인데 비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겪는 편견차별은 24.7로 조사된 바 있다(전기택 외 2013).

시민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반다문화 및 외국인 혐오주의의 집단화 및 정치세력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한다. ‘신인종주의’를 매개로 인터넷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다문화주의자들의 규모는 6천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한국인의 내면화된 인종주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강진구 2012, 김현미 2014).

이와 관련 국제 사회는 한국 사회에 낯선 인종차별 혹은 인종주의의 위협에 대해 거듭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4년 유엔특별고보관은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10-06).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사회에 비시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한국 정부가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종주의에 둔감한 한국의 주류 사회와 달리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 문제의 위험성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외국인주민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경우 이주민들의 차별 경험의 상당 부분은 ‘인종/피부색’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표2)

<표3> 경기도 외국인 주민 차별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설명 \ 요인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설명변량	21.6%	20.1%	15.2%

p=0.586

2016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인종차별실태모니터링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교육 공간, 직장, 상업, 근린, 제도, 교통, 사적 공간 등 전방위적인 일상의 공간에서 인종차별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적 인종주의’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교육 및 제도 공간에서의 인종주의적 차별 역시 매우 광범위

하게 관측되었다(오경석·이경숙 2016).(표4)

<표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6인종차별 모니터링 차별 장소별 사례 현황

차별 장소	사례 수
사적 공간(가정 등)	18
교육 시설(학교, 학원 등)	34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18
근린	26
미디어	5
병원	8
상업시설(옷가게, 식당 등)	27
제도(주민센터, 법무부 등)	20
종교 및 엔지오	3
직장	31
합	190

네 가지 차별 범주와 관련된 무시, 비하, 모욕, 혐오가 가장 많았고, 고정관념과 편견,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따돌림과 분리 등도 일반적으로 관측되었다. 거부, 폭언 및 협박, 무고 등 보다 적극적인 차별 행위도 적지 않게 관측되었다.(표 5)

<표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6 인종차별 모니터링 차별 행태별 사례 현황

차별 행태	사례 수
고정관념과 편견	32
무시, 비하, 모욕, 혐오	53
기회와 처우에서의 불평등	24
폭행	3
따돌림과 분리	22
거부	17
기본권	8
성희롱	3
폭언 및 협박	15
무고	8
합	185

VI. 과제와 전망

이주민은 21세기의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는 폄하되기 마련이다. 오히려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비현실적인 공포가 확산되고, 무자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주민 관련 정책 및 제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가 봉쇄되는 경우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 특히 경기도의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는 타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이주민의 규모, 역량, 제도 및 시민사회 인프라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중앙 정부보다 앞서 이미 2007년 ‘거주외국인 정주지원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에서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저해 외국인 인권정책 전담 개발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중인 곳이다. 도내 7곳의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 종합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주민이 주류 사회의 시민들과 평등한 공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복병은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 생활 세계와 사적 공간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주의’이다. 국제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며 가장 위험시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관행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용된다. 인종 관련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범죄로 간주되지조차 않는다. 경험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관념의 산물로서 신/인종주의는 놀랄만한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은 단순히 법제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제도적 차별과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 민주주의가 탐색되고 실험되고 구현될 수 있는, 지역 사회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은 결코 이주민 혹은 외국인 주민만을 분리된 타겟으로 하는 프로젝트일 수 없는 셈이다. 그것은 지역 주민 모두가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탈전통적이며 대안적인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공간이다.

이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포럼이다. 욕구의 현실성을 승인하되 다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포럼, '합의'를 추구하되 '이견'을 경청할 수 있는 포럼,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신봉하되 다른 정체성과 달라질 수 있는 자유 역시 억압 없이 공론화될 수 있는 포럼. 경기도에서 이러한 포럼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진구. 2012.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32집.
- 고현웅. 2016.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과 과제. 2016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책포럼 자료집.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김영정. 2012. “사회통합, 시민권, 민주주의: 마이너리티의 참여”. 미간행논문.
- 김준현·문병기. 20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호.
- 김현미. 2014.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2014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 박세훈 외. 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2):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 안상수 외. 2016.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용승. 2016.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호.
- 오경석 외. 2013. 경기도외국인가족의 인권상황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오경석 외. 2015. 경기도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오경석.이경숙. 2016. 경기도인종차별실태모니터링.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이용승. 2016.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호.
- 전기택 외.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병두. 2012.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및 지역정책과제. 국토 통권364. 국토연구원.
- Benton, Meghan 2010. A Theory of Denizenship. submitted for the degree of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Department fo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 Castles, S. · Davidson, A.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Politics of Belonging. Routledge. New York.
- Garbaye, R. 2005. Getting Into Local Power: The Politics Of Ethnic Minorities In British And French Cities. Blackwell Publishing.
- Takeyuki Tsuda. 2006. Localities and Struggle for Immigrant Rights: The Significance of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Takeyuki Tsuda. ed.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종합 토론

좌 장 | 양 훈 도(한벗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토 론 | 이 진 복(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이 정 환(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 인 수(경인일보 문화부장)

정 암(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